

---

#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

---

2024. 8.

## 목 차

1. 한국형 특허박스(Patent Box) 제도 도입 .....	1
2.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·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...	3
3.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.....	4
4.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부담 완화 .....	5
5.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.....	7
6. 특허분쟁 관련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.....	9
7.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.....	10

## 1

## 한국형 특허박스(Patent Box) 제도 도입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EU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&D 세제지원 외에도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\* 운영 中

\*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

- '73년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

<주요 국가의 특허박스 도입 현황>

구 분	시행연도	대상 지식재산권			특허박스 세율	법인세율
		특허	소프트웨어	기타		
Albania		○	○		5%	15%
Andorra	2010	○	○		2%	10%
Belgium	2008	○	○		3.75%	25%
China	2008	○			15%	25%
Curacao	2018	○	○	○	0%	12.5%
Cyprus	2012	○	○	○	2.5%	12.5%
France	2000	○	○		10%	25.83%
Hungary	2003	○	○		4.5%	9%
India	2016	○			10.3~11.85%	30.91~35.45%
Ireland	1973	○	○	○	6.25%	12.5%
Lithuania	2018	○	○		5%	15%
Luxembourg	2008	○	○		4.99%	24.94%
Malta	2010	○	○		1.75%	35%
Netherlands	2007	○	○	○	9%	25.8%
Poland	2019	○	○		5%	19%
Portugal	2014	○			3.15%	21%
Serbia		○	○	○	3%	15%
Slovakia	2018	○	○		10.5%	21%
Spain(Federal)	2008	○	○		10%	25%
Spain(Basque Country)	2008	○	○		7.2%	24%
Spain(Navarra)	2008	○	○		8.4%	28%
Singapore	2018	○	○		5% or 10%	17%
Switzerland	2020	○			주마다 다름 (최대 90% 면제)	주마다 다름 (11.9% ~ 21.6%)
Turkey	2015	○			12.5%	25%
United Kingdom	2013	○			10%	25%

\* 출처: Izabella Sara-Alex Mengden, "Patent Box Regimes in Europe", Tax Foundation, 2024 July 16과 Silva-Gómez · Méndez-Prado-Arauz, "What's Happening with the Patent Box Regimes? A Systematic Review", Sustainability, 2022를 참고하여 정리

- 우리나라는 다양한 R&D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, R&D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한적
-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'22년 조세지출규모\*는 6억원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 부족
- \*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(2023.9)
- 또한, 우리나라의 R&D 및 특허 관련 사업화 성과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

< '17~'21년 정부 R&D 사업화 현황 >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	증가율	
						전년대비 (‘20~‘21)	연평균 (‘17~‘21)
정부 R&D 사업화	32,656	25,973	28,601	32,589	25,170	△22.8	△6.3
특허 관련 사업화	15,102	15,127	16,842	18,061	13,172	△27.1	△3.4

\* 출처: 2022년도 정부 R&D 특허성과 조사·분석 결과(안)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'24. 2. 29

-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전·후 관계를 아우르는 포괄적 세제 혜택 도입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

\* 영국사례 : 통상 법인세율 25%, 특허소득 관련 세율 10% 적용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지식재산은 기업 경영활동에 중요한 자산으로,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
- 그러나,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, 대기업 대비 인력·재원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
- 미국, 중국,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 관련 비용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 中
  - \* 미국: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및 특허취득 비용 등을 공제
  - 중국: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 공제
  - 프랑스: 특허생산 및 유지비용 등을 공제
- 반면, 우리나라는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해외 특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
  - \*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: 소득세법 제12조제5호(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),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(R&D세액공제) 및 제12조(기술이전·대여에 대한 소득공제)
-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, 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특허 확보를 적극 장려할 필요

### □ 건의내용

- 중소·중견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·등록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기업에  
 승계한 경우 그 대가로 보상을 제공받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용 中
-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'80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 
 비과세하다가 '16년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 
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 증가

\* 직무발명보상금은 7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

- 그러나,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 
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그 대가로 받는 보상금 성격으로 근로 제공의  
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
- 대법원 판례도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 
 소득으로 인정(대법원 2015.4.23. 선고 2014두15559 판결)
- 일본은 소득세 부과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잡소득  
 (기타 소득)으로 분류하여 과세(과학기술정책 Brief Vol. 21, '24.2.5)
-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혁신활동 촉진 및 우수한 연구성과를  
 확보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필요

### □ 건의내용

-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상향  
 (700만원 → 2천만원)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특허청은 중소·중견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료, 등록료, 수수료의 감면제도\* 운영 中

\* 중소기업은 출원료·심사청구료·최초 3년 특허(등록)료의 경우 70% 감면하고 4년  
분부터 존속기간까지 특허(등록)료의 경우 50% 감면, 중견기업은 30% 감면

-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 
중소기업보다 평균 약 7배 많은 지식재산권 보유

\* 지식재산권 평균 보유 현황: (제조업) 중소 10.6건 < 중견 75건  
(전업종) 중소 9.7건 < 중견 40.1건

출처 :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, 중견기업 기본통계

- 중견기업은 소부장 기업의 비율이 높은 공급망 핵심 기업群으로,  
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다수의 지식재산권 보유

- 그러나, 현행 특허료 산정 체계는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해 부과하며,  
보유 지식재산권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

\* 특허(기본료 기준: 매년):

[설정등록료] 1~3년분 13,000원

[연차등록료] 4~6년 36,000원, 7~9년 90,000원, 10~12년 216,000원, 13~25년 324,000원

-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특허료(연차료) 감면을 시행 중이지만, 다량의  
특허 등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특허 유지에 부담이 되는 상황

\* A社は 약 130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 중이며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 
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지 비용 부담 증가(중소기업일 때 1.2억원 소요되었으나, 중견기업  
성장으로 1.7억원 비용이 발생).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지식재산권 연차등록 포기

## □ 건의내용

-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유 수 및 기간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비용 부담 완화
  - (1안)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비율 50%로 확대
  - (2안)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비율 50%로 확대

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산업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고도화로,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에 매진 中
- 특허청은 이러한 대내·외 환경에 발맞춰 첨단 기술 분야\*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
  - \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관련 결과물 등
- 그러나,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 등록까지 평균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어 기술가치 유지의 불투명성 및 사업계획 이행의 불명확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
- 특히, 중소·중견기업은 대기업 대비 특허 관련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 가중

## &lt; 특허심사기간 관련 중견기업 현장 애로 &gt;

기업명	주요 내용
B社	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 등록 후 빠른 사업화가 필요하나 특허심사 소요기간이 길어 애로 존재
C社	특허 등록까지 2년 정도 소요되어 당초 사업계획 상 이행시기와 큰 간극이 발생하며, 해당 기간 동안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특허에 대한 사업화 이행의 차질도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
D社	특허 등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, 관련 비용(특허법인 수임료, 자문료 등)도 비례하여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 초래. 일괄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지재권 획득 소요시간 단축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, 권리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 심사 기간 단축
- 비용·인력 등의 문제로 우선심사 대상 확대가 어렵다면, ‘일괄심사 제도\*’를 적극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획득 소요시간 단축 필요
- \*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글로벌기업 간 특허 관련 분쟁 증가
- 중소·중견기업은 특허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, 외부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, 장시간 소요되는 특허분쟁 특성 상 많은 비용 소모
- 특히,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,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첨단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
- 일례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1~4위 기업\*의 국내 특허 등록건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에 116.4%\*\* 급증하였고,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1,000건이 넘는 특허 등록 진행 中
  - \* 도쿄일렉트론(일본),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(미국), 램리서치(미국), ASML(네덜란드)
  - \*\* ('19) 585건 → ('20) 867건 → ('21) 1,157건 → ('22) → 1,133건 → ('23) 1,266건
- 최근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
  - \* (주)유진테크(중견):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社가 총 4건의 특허침해소송 제기('24.2月)
  - PSK(중견): 미국 램리서치社가 총 6건의 특허침해 및 장비판매 금지 소송제기('21.10月)

## □ 건의내용

-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특허 관련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술이전·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아, 적극적으로 대기업이 기술거래에 참여할 요인이 부족

\* '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' 조세지출 현황: ('05) 1,920억 → ('22) 6억

- 이로 인해 중소·중견기업은 자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고, 대기업과 우수한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 축소

- 또한, 특허권 등의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\*가 일몰되어(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), 기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욱 축소됨

\*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: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% 공제  
중소기업외의 자가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: 소득세 또는 법인세 5% 공제  
(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함)

- 중소·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원활하게 취득하고, 자체 개발한 기술을 대여·판매하여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확대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(취득) 특허권 등의 취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중견기업의 공제 한도 확대

\* (現) 중소기업 10%, 대·중견기업 5%

→ (1案) 중소·중견기업 10%, 대기업 5%, 2案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8%, 대기업 5%

- (이전·대여) 중소·중견기업에 기술을 이전·대여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대상 포함

\* 이전소득: (현행) 중소·중견 50% → (확대) 중소·중견기업에 특허 이전한 대기업 10%  
대여소득: (현행) 중소·중견 25% → (확대) 중소·중견기업에 특허 대여한 대기업 5%